

# 민주 “국민 58% 이전 반대” vs 국힘 “국방부가 정치하냐”

## 민주 “이전비용 496억, 예타 기준 맞춘 품수” 국힘 “공간 재배치일 뿐...신구 권력 협조해야”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촉박한 일정과 안보공백 우려를 부각시켰다면, 국민의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엄호에 나선 가운데 이전에 난색을 표하는 국방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군사시설 이전 때는 법령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우리 국가 안보,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재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제 공간, 지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87년 헌법체제를 고치는 것 개헌과 헌법 개선을 통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행이 필요하지 안보공백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었다.

설훈 의원은 이나 나온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9~20일 실시)를 거론하며 “여론조사에서는 58%가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을 33%가 ‘옮길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참 쓸데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비용 496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혀버린 것”이라며 “굉장히 품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대대급 부대 이전 기간을 거론하며 “평균적으로 내가 기억하기로 3년에서 5년 걸렸다”며 “위기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하다보니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두달밖에 안 걸린다. 보름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옮겨도 되느냐. 이사하듯이 옮겨도 되느냐”고 가세

했다. 김민기 의원이 “만약 국방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어디로 이전을 하고 장관이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 두달 이내에 가능하냐”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자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모든 걸 신속하게 3~5년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심상치 않을 때 데프콘 2이면 모든 부서가 강남의 모처 산 밑 병커로 다 들어가서 일을 수행하지 않느냐”며 “가도 전혀 문제 없다. 3~5년 걸리는데 (이전하면) 졸속이고 2개월은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간다. 중령 때부터 무수한 단말기를 갖고 왔었다 많이 한 걸 장관은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신 의원이 제차 “한 2개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는 빠듯하지만 그런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서욱 장관은 “지금 (이전에) 짧은 시간이 요구되기에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사가 아니라 공간 재배치 아니냐. 합참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오니 많은 여유



공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공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 서버를 합참 지하에 옮기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행정안전부에서 30년 근무했다. 대전 국가정보관리원 서버에서 청와대에 라인이 연결돼있다. 국방부 지하 서버에 망 하나만 연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허은아 의원은 “적어도 국방부는

점지를 해선 안 된다. 적어도 국방부 본연의 일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허 의원이 “오전에 없던 안보개념이 오후에 갑자기 생겼다. 문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서욱 장관은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아니고 인수위쪽에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정환 합참 차장은 성 의원이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공백 가능성을 묻자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두 달만에 이전 가능?’ 묻자 서욱 “정상절차라면 안 해”



서욱 국방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2개월 만에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대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만약에 국방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어디로 이전을 하고 영

내에 있던 것을 또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장관께서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 두 달 이내에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의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는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합참 차원의 작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환 합참 차장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의 안보 불안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민주당 광주시장·구청장 경선룰·시기 ‘촉각’

### 현역 평가 하위 20% 감점 페널티·복당자 대신 기여도평가 ‘변수’

6·1지방선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은 이번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경선룰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관위가 구성되면 중앙당은 광주시장, 광주시당은 5개 구청장,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방식은 민주당 당헌 당규 규정에 따라 완전국민경선인 국민여론조사 100%와 국민참여경선인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배심원단 경선 등 4가지 방식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구청장은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

표 100%로 후보를 선출했다. 기초의원들은 대부분 경선 없이 공관위 평가로 결정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경선 방식 적용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경선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당 공관위에서 이달 말쯤 경선 방식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오면 그것을 토대로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선시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 순으로 경선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같은 순서대로 갈지 관심이 다.경선순서는 각급 후보간 조직이 연동된다면 점에서 경선 결과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공관위가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만큼 경선 시기는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정계에 돌고 있는 경선 일정은 가짜 뉴스라는 게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실시한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결과도 경선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직에 대해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각각 20% 감점을 주기로 했다.

광주 5개 구청장의 경우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불출마하지만, 평가를 이미 받은 상태다. 결국 김 청장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명 중 1명이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에 대한 대선 기여도에 따른 페널티 적용 여부도 경선과정에서 변수다. 민주당은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복당자 중 하위 10%만 탈당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고 나머지 90%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선욱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